

•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는 가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안보의 무장해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체계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선인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 완전 폐지가 아닌 존치나 개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안보가 아닌 국민 모두의 안보를,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기억의 공포에 기대지 않는 실존하는 안보를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즐기차게 국가보안법이 끼쳐온 민주주의의 왜곡과 인권침해 등을 사실에 기반해서 말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기사 처음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여성·장애·비정규·이주·빈곤 주제로 '차별철폐대행진'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섰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32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전국 걷기 대행진'(아래 대행진)을 시작했다. 대행진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돈과 경쟁을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은 생계를 위협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파괴하며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건전한 가치와 상식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차별의 유형에 따라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실업으로 나뉘어 행사가 마련됐다.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빈곤'으로 내몰리며 끊임없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사회구조와 시스템은 장애인들에게 생계 수단으로의 접근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이고 용불안 속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마저 차별 당하며 절망 속에서 목숨을 끊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사회에서 피부색과 인종으로 차별 당한다. 또 사회적 양극화의 결과 400만의 빈곤층, 360만의 신용불량자, 140만의 최저생계비 수급자, 100만의 실업자 등은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조직위는 "차별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선 안 되는 공공의 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도록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여성 차별철폐의 날(14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15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의 날(1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의 날(17일), 빈곤·실업 추방철폐의 날(18일)을 정해 부문별 행사가 진행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주제별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19일에는 모든 단체들이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차별철폐한마당'을 열 계획이 다.

<기사 처음으로>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오늘로 김재복 수사는 51일째, 동화작가 박기범은 37일째 목숨을 건 밥 굶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경북 울진에서 시작하여 청와대로 걸으며 이라크에 간 한국군의 철군을 외친다.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미군의 총알과 포탄으로 죽어 간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후로 4만 명 이상의 이라크 인민들이 죽었다. 이라크의 많은 사람들이 후세인의 철권 통치 아래서 신음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군홧발 아래서 숨막히는 삶을 산다. 이라크 인민들의 미군에 대한 저항은 끝이 없다. 아마 미국의 패권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원하지만 이라크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라크인 모두의 목숨이 아니다. 그들은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석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라크가 미국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시장이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잘 듣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놓고 이라크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생각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들을 그렇게 했듯이.

미국의 패권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은 이라크 인민들에게 민주, 평화, 자유, 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사랑발람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좋은 가치를 찾으려 살아가는 목숨을 마구 죽인다. 부시는 새벽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한다고 한다. 그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고 허락하시나 보다.

이런 모든 것이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국가 폭력'이다. 국가는 개인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생겼는데 이제는 그 국가가 온갖 좋은 가치를 입으로 나뉘며 때때 살아있는 것들을 함부로 죽이는 폭력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 남녘 인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는데도 국가 이익을 내세워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제 침략 전쟁에 군인을 보낸 전쟁 범죄자가 되었다. 이라크에 간 한국군들은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대다수의 이라크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이다.

지난 9월 3일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조용한 마을 베슬란시 제1중학교 입학식에 인질 사건이 일어나 수백 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무장세력들이 어린아이와 여성 등을 인질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도 잔악한 것이지만 인질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별 협상 없이 무자비하게 강제 진압하여 어린 생명들을 앗아가게 한 러시아군의 폭력은 끔찍한 학살이었다. 총탄이 난무하는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 하여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러시아군의 무력 진압은 명백한 학살이요, 국가 이익을 앞세운 국가 폭력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국가 폭력 앞에 저항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는 미국의 침략 전쟁을 온몸으로 거부해야 한다. 국가 이익을 앞세워 침략 전쟁에 보낸 군인들은 모두 철군해야 한다. 테러범을 잡겠다는 이유로 수많은 목숨을 죽이는 학살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 김재복 수사과 동화작가 박기범은 목숨을 건 밥 굶기로 이런 국가 폭력에 맞서고 있다. 이라크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도록 한반도 남녘의 군인을 보낸 것을 뉘우치며 평화의 바람을 조용히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세상은 자기 목숨 버리며 남의 목숨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갖 국가 이익을 들먹이며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하나.

© 은중복 님은 '풀무질' 서점 일꾼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안평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15일 (수)
제 26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 한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2.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3. 전 국민이 피해자다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 언론이 보이는 특징은 마치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장보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바로 국가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발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며 광화문 거리를 뛰여다닌 사람이 나타난다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안보위협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처벌해 왔으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끼치지 않는 한 언론과 표현, 사상을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도는 없었던 반면 대통령의 발언 등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량을 늘린 것을 비판했다. 이정호 정책국장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8개 신문의 보도량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5백46건인데, 이에 더해서 지난달 5일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후 6일간의 보도량이 2백82건으로 전체 보도량의 51.6%를 차지했다"며 "메달 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나오는 데 비해 지금 신문사들의 지면 제작은 찬반양론을 떠나서 정상적이라 하기 어렵고 한국 언론의 떼거리 근성을 반영한다"고 질책했다.

국보법의 개폐를 둘러싼 언론의 '기회주의적인' 보도 행태도 이야기됐다. 보수언론들이 상황에 따라 국보법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오락가락' 바꾼다는 것이다.

민언련 김은주 협동사무처장은 "보수신문은 국가보안법 개폐요구가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에는 '국보법 문제 있다'며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는 '시기상조'나 '최후의 무기'라고 말을 바꾸어 개정조차도 가로막는 태도를 되풀이 해 왔다"고 신문사들의 기사를 비교하며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을 언론이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언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겨레 손석춘 논설위원은 "언론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기막힌 사실"라고 꼬집었다.

언론사 내부의 권력구조도 한몫 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48년 국보법의 탄생 이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문들의 비판 의식은 꾸준히 후퇴해왔다. 이는 사주들의 권력이 갈수록 강화된 것에 기인한다"며 "91년 동아일보에 사주 김병관이 이른바 '신보도지침'을 내렸고 그 후로 그런 기사들이 끊겼다. 사주들이 국보법에 대해 압력을 가해서 기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면도 크다"고 국보법과 관련하여 사주 권력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기사 처음으로>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강패 안내" 목격자 진술

변칙적인 관장 연임을 반대하며 노조와 이용자들이 농성 중인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본지 8월 12일자 참조)에 회관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농성 85일째인 14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사태 책임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8일 새벽 2시 50분 경 공대위가 농성중인 정립회관에 친관장과 봉사단원들인 곰두리봉사회와 쇠파이프를 든 괴한 등 80여명이 난입하여 노조원과 중증장애인 등을 농성장에서 끌어내고 비장애인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대위 쪽에서는 "정립회관 쪽에서 용역강패를 고용해 이날 사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진술과 통장 기록이 제시되었다. 이날 공대위는 '폭력사태 당일 정립회관 직원이 정립회관 정문과 주차장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곰두리 봉사회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괴한들이 흉기를 들고 농성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 택시운전기사의 증언을 전했다. 또한 9월 8일 오전에 폭력사태 가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대금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름으로 입금한 식당 통장 기록을 제시했다.

박경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회관 측은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입의) 증거가 다 드러났기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 원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 공식면담을 제안했다.

한편, 직원들과 곰두리 봉사회가 농성장에 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0일에는 비조합원들과 체력단련동호회 등이 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농성장에 진입하기도 했고, 11일에는 곰두리 봉사대 등이 진입을 시도하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8일의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사태가 이렇듯, 광진구청과 서울시,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폭행을 자행한 것은 회관측이 노동자와 이용자들을 제1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문제가 "단순히 정립회관과 소아마비협회 이사회 차원의 문제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김근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현애자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공대위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중, 이완수 관장이 승용차를 타고 회관 안으로 들어오려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완수 관장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되돌아 나가는 촛극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완수 관장은 2년간의 새 임기를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기사 처음으로>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어떤 사람이 거리를 걷다 왼쪽 겨드랑이가 간지러워 긁으려고 왼팔을 들었다. 이때 덩치 큰 어떤 이가 오더니 "네가 팔을 들어 나를 주먹으로 쳐 죽이려했다"며 다짜고짜 그 팔을 부러뜨렸다. 같은 일이 모자를 고쳐 쓰려는 이와 머리를 고쳐 묶는 이에게까지 몇차례 되풀이되자 거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팔을 옆구리에 꼭 붙이고 손목만 가딱 가딱하며 걷게 되었다.

국보법체제, 일상 전체를 짓누르다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억압체제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공포의 무의식에 몰아 넣고 자기검열을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목적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진실을 말하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습하였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도 잘못하게 되다가 결국 진실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폐단은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그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짓눌렀다.

사회는 상식을 깨는 학문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기존 이론의 경계를 뛰어넘어 반박하고 비판하면서 진리의 추구에 한걸음 다가가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애매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처벌함으로써 학자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동화 교수(성균관대 법학)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피하다"는 강연회 발언이 반공정신에 어긋난다며 구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가 사회과학적

이론을 자유로이 펴기란 불가능하다.

학문·예술의 자유에도 금을 그었다

예술은 인간의 꿈과 열망과 동경을 표현하는 분야로 그 상상력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공권력의 잣대로 상상력에까지 난도질을 행했다.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상단의 평화로운 모습과 하단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북한과 남한으로 대치시키는 '공안적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화백은 어릴적 고향의 모내기 풍경을 떠올려 그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문화를 향유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철퇴를 가했다. 자신이 읽은 책이, 책방에서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공안기관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둔갑할 때,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그물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치와 통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1958년 진보정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줄곧 대안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제도는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들 대다수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며 그들의 행복을 저만치 멀게 만들었다.

91년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적으로는 통일의 한 주체이고 단기적으로는 화해와 교류의 대상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현실을 무시한 규정을 내리고 있어 화해에 반하는 증오를 재생산해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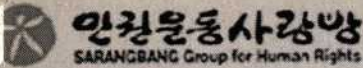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은 학문과 예술을 억압하여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정치지형을 왜곡시켜 일부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통일을 가로막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국민들과 무관한가?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 삶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직접 처벌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체제가 생산한 부조리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억압하였다.

"국가보안법 준치로 피해를 받거나 불편한 사람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과 남한내 주사파 및 친북세력뿐"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덕룡의원의 말이다. 이 논리는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권뿐만 아니라 냉전적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91년 7차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남용이 없었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면 97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자가 633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기 바란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성을 짓누르고 그 자리에 막연한 공포와 자기검열을 채워 넣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어느 특정 세력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16일 (목)
제 26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2.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3. 국제엠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합당미달'
4.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아래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5일을 마지막으로 4차례의 공청회를 끝내고, 23일 입시안 최종 확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입시안은 △내신 석차 9등급제 △수능 9등급제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내신 등급제'는 사실상 '점수제'와 다름없고, 수능의 변별기능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수능 등급제'는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별 자율적인 선발권 강화'는 오히려 고교등급제를 확대시키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연세대의예과 수시모집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고, 이같은 사정은 다른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대학들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 선발권이 주어지면 고교등급제는 기정 사실화되고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안에는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대책이 부재하고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교조는 이번 입시안이 "대학서열체제와 같은 학벌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줄속으로 입시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는 정부 내에서조차 이번 시안 마련을 비공개로 추진했고, 교육·사회단체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이미 진행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토론자와 청중들의 질문과 의견제시에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60여 개의 교육·사회단체들은 '고교등급제·본고사부활 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긴급대책위'(아래 긴급대책위)를 구성,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등급제와 대학별 본고사 금지 조항 명문화 △2008년 이후 수능 폐지 △내신평가 시 교사별 평가제 도입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17일 긴급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바른 입시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이슈를 알리고 개선시키기 위해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85년 조각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98년 석방된 황대권 씨를 비롯 민가협 임기란 회장,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등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이 참석해 인권침해 상황을 아버지 유엔인권고등판무판에게 직접 전달, 이와 같은 인권침해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가 방한 기간 중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한다고 참석 소감을 밝힌 아버지 유엔인권고등판무판은 "인권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압도되고 감동을 받았다"며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나아질 것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부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인권단체나 피해자들을 꼭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정부대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얘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버지 유엔인권고등판무판은 간담회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폐지했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처음으로>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합류미달"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앰네스티 본부 동아시아팀 라지브 나라얀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지난 90년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라지브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이 시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감시할 것은 물론이고, 대체입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지 못한다면 대체입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사 처음으로>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산대상인 친일파들이 일제의 유체를 부활시킨 탄생해서는 안 될 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폐지가 예정되었던 한시법

국가보안법은 개정 당시 내란상황이 정리되면 없애자는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시한부 생명을 기약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9년 이 법에 의해 남로당 등의 좌익세력과 한독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 등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오히려 강화되어 개악되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 구금돼 전국 감옥의 80%를 정치범들이 차지해 감옥과 법원을 증설할 정도였다. 법원과 판사도 부족하다며 1차 개정 때는 아예 단심제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악됐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초안을 잡았던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폐지 반대론자들이 애용하는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와 이 제안을 부결시켜 애초 한시법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면서 더욱 강화된 악법으로 되어버렸다.

추악한 계약의 역사

국가보안법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58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제3차 개정 때였다. 당시 경향, 조선, 동아일보도 모두 이 법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률이 계약되었을 때 일제히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때 '인심혹란죄'가 등장하여 오늘의 7조(찬양·고무)의 원형이 형성됐다. 민심의 극심한 이반 속에서 집권의 연장을 피하던 이승만 정권은 무술경관을 시켜 개정 반대 농성을 하던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여당 의원들만으로 법을 계약했다. 그때 6개조였던 법조문이 40여 개로 늘어났고, 최고형이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계약된 국보법은 1960년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부분 되돌려졌지만, 다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고스란히 부활되었다. 박정희는 국보법의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에서 심지어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내란을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불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7조 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여당인 민자당(지금의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야당인 평민당은 대체입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1991년 5월 31일 여당 의원만으로 단 35초만에 날치기 통과됐다. 그 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고,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남북간에는 남북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루어졌지만,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법의 악순환으로 정당성 상실

결국 이런 국가보안법의 계약 과정을 통해 한시법이 유지·강화되었으며, 정부는 비판 세력들을 제거, 억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써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활용해 왔다. 또한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성마저 갖추지 못하였으며,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강화되고, 독재정권 강화 목적으로 찬양·고무(7조) 조항이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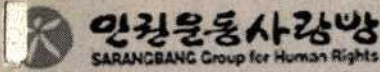
지금까지 7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헌정을 유린한 불법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날치기 통과와 계약을 반복해 왔다. 이런 역사를 볼 때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마저 상실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17일 (금)
제 26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2.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3.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정실 점거 농성 돌입
 4.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5.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루이스 아버는 "결정적으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관계자와 피해자를 만나 내린 최종 결론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폐지가 안된 것이 의아하다"며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뒤늦은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이성훈 팩스르마나(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단체)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을 대표해 전세계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지구적 양심의 보루"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이번 발언이 현재 정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는 국내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던 인권고등판무관이 정부 관계자 및 인권단체, 인권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유엔인권기구들의 기존의 견해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 처음으로>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도 계속됐다.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13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을 외쳤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한국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일하던 4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며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견을 밝혔다.

민가협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세계 인권기구들은 한국 인권향상의 구조적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에 진정한 '지지를 보낸다'고 조건 없는 국보법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참여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는 최근 보수 인사 천여 명이 '국보법 사수'를 외친 이른바 '원로 선언'에 대해 "군부독재에 빌붙어 장관이나 국회의장이니 하며 재산을 모으고 영달을 누린 자들이 자칭 '원로'라며 보안법 영속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또 이돈명 변호사도 "보수 인사들의 '원로' 선언은 사라진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사 처음으로>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동성 돌입

16일 오후 2시, 비정규노동자 대표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대표단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표단 15명이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이들은 비정규직 입법안이 사실상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법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이상 리영희), 『페다고지』 (파울로 프레이리), 『아리랑』 (남 웨일즈),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해방전후사의 인식』 (송진호 외)… 이상 나열한 책들은 어느 저명한 기관에서 선정된 교양도서목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모두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이적도서목록이다. 지난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판례에 나타난 이적도서표현물' 목록에는 모두 1200여종 이상의 책제목이 올라와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은 물론이거니와 위에서 열거한 책들과 같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았음직한 책들도 현재까지 버젓이 이적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89년 출간된 이래 1997년에 이미 450만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한 조정래 씨의 소설 『태백산맥』은 검찰에서 벌써 10년째 이적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화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은 극중 '적기' 삽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이적, 즉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처벌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웃지 못할 황당 사건 퍼레이드

국가보안법은 비단 학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만 비상식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심결에 내뱉는 말 한 마디, 행동거지 하나에까지 그 손길을 뻗고 있다. 1970년 자신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온 철거반원들을 향해 "김일성보다 더 한 놈들아!"라고 무심결에 소리쳤던 김아무개 씨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80년 연세대생 박아무개 씨는 『무림파천황』이라는 무협소설을 발표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설 내용을 문제삼아 소설 중의 대결구도와 즐거리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박 씨를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박 씨의 소설이 정파와 사파가 벌이는 대결구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했고,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을 향해 '남진'을 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설이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국내 안보를 위협했다고 시비를 걸었다. 무협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대립의 단순한 서술구조에마저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인 것이다. 결국 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2년을 복역해야만 했다.

1986년에는 친형의 칠순잔치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왜 공산당이 나쁘냐!"라고 말을 내뱉었던 김아무개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북괴 공산당과 그 수괴인 김일성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 국가보안법은 자유로운 일상 토론 공간인 인터넷 게시판에도 개입해 비상식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성공회대 학생 전모 씨는 2002년에 인터넷 다음카페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신자유주의, 조선일보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야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자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와 같이 법 조항의 모호함과 비상식성으로 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은 평범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역, 일상적인 영역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속박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사고방식과 양심을 국가보안법의 틀 속에 가둬두게 했다.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한 명인 송두율 교수의 스승이었던 위르겐 하버마스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가리켜 "국가보안법이 살아 숨쉬는 야만의 땅"이라고 했다. '야만의 땅'에서는 결코 평화와 인권의 싹을 틔울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결코 웃을 수만은 없었던 지난날의 황당한 이야기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주제 : 인권의 역사-마그나카르타에서 세계인권선언까지
기간 : 2004년 10월 6일-12월 8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문의 : 류은숙 (02-3675-5363)

- 1강(10/6) 특강: 차병직 운영위원(변호사)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 2강(10/13) 기본적 인권의 등장배경
- 3강(10/20) 특강: 최갑수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인권
- 4강(10/27) 시민혁명과 인권
- 5강(11/3) 산업혁명과 인권
- 6강(11/10) 특강: 이경주 운영위원(인하대 법학과 교수) -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 7강(11/17) 특강: 조효제(성공회대 NGO학과 교수) - 국제인권
- 8강(11/24) 세계대전과 인권
- 9강(12/1) 세계인권선언을 넘어서
- 10강(12/8) 세계화와 인권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18일 (토)

제 26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2.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3. 9월 반듯볼,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4.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은 그동안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당해온 파견 노동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인력모집과 공급, 임금정산 외에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30%~50% 안팎의 임금을 매달 수수료명목으로 떼어 '사람장사'를 하고 있는 파견업체와 자본에게 모든 노동자들을 갖다 바치겠다는 꼴이다.

그러더니 온갖 업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파견은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이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받는 차별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하겠다고 으쓱대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현재의 업종을 더욱 세분화하여 '동종 업종'이 아닌 업종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 비교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없앨 것이다. 그것이 힘들다면 고작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위반 과태료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더욱이 '구제조치'가 파견근로라는 고용 형태를 상상시킬 것이라며 이것마저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총의 입술에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면 별 문제 없다"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유엔 사회권 규약은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정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비정규노조 대표단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악 중단과 노동계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지주의'로 몰아붙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정규직 노동자가 분담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더니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차별을 교묘하게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 입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정규노조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묵살한 채 노동법을 개악하려하고 있다"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1400만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좌우할 비정규직 입법을 앞두고 농성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법일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기간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싸움이 전체 노동자들의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단은 농성의 수위를 높여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열린우리당 의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농성단이 사과를 하고 철수를 해야만 면담에 응할 수 있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남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이 농성을 핑계삼아 무책임과 무사안일로 일관할 수 있느냐"며 "노동법 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단식 농성에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와 한국노총 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를 제안해 다음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미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한 상황이다.

<기사 처음으로>

9월 반딧불, "대학 내 **정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새벽부터 시작해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최저임금을 갖 넘긴 월급을 받으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달래야 했던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둔 지난 6월, 고려대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다. 전원 고용승계와 노조 설립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고 마무리된 싸움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려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9월 반딧불은 이들의 투쟁을 소개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야할 먼길을 한 발짝 재촉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작인 <점거>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벌인 생활임금투쟁의 순간 순간을 묘사한 역동적인 다큐멘터리로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싸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버드 대학의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극빈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임금 삭감과 해고 위협 앞에서 거대한 학교를 상대로 선뜻 투쟁에 나서지 못한다. 하버드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학내 건물을 점거하는 등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며 학교 내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결국 스스로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임금투쟁을 승리로 이끈다. 작품은 다국적 기업의 총수들로 구성된 법인이자 막대한 기부금을 쌓아둔 부자대학의 실체를 고발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목소리를 군데군데 새겨 넣으며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불어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견고한 신뢰와 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영화 상영 전후에는 고려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환경실태에 대한 설문과 OX 퀴즈, 노래패 등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때: 9.20(월) 늦은 7시
곳: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문의: 02-741-2407

<기사 처음으로>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안들이 하나같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공백은 없다

먼저 대체입법안이라는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 '테러방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매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파괴활동금지법안'에 두는 등 국가보안법이 갖는 독소조항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미 형법 안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 조항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형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되는 제2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더욱이 현행 형법 제87조는 '국토의 침탈과 국헌 문란에 대한 내란죄'를 규정하고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는 단체나 구체적인 활동은 이미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의 다른 조항 역시 현행 형법으로 규율이 되는 부분을 이중으로 덮어 써서 '형법의 국가보안법화'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형법은 민법과 함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연동시켜 '형법의 국가보안법화'를 추구한다면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형법이라는 외피를 쓰더라도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형법을 보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뒤에 정말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처벌공백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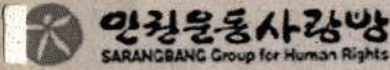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으로 그동안 처벌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학생들의 민주적 선거로 구성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몇 년씩이나 수배생활을 하게 만들고,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저명한 교양서적을 이적표현물로 낙인찍어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처벌을 없애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적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처벌 조항들이 사라져 '처벌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즉, 처벌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범죄로 만들어 처벌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고, 그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정한 이유다. 이런 목적을 망각하고 '처벌공백'을 없앤다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겨 놓는다면, 몸에 박힌 가시를 아파서 빼려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과 같다.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조직들을 죽이기 때문에 잘라내자는 것인데, 위에 있는 암세포를 떼어내서 뇌에 이식하여 똑같은 일을 하게 할 셈인가? 국가보안법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폐지하면 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던 그 공백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채워질 때만이 국가안보도 지켜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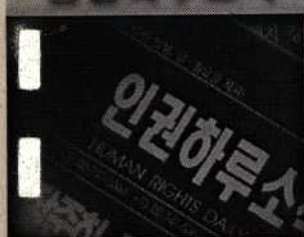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21일 (화)
제 26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2.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3.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4. 주간인권호를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가지고 있는 형법으로도 반국가적인 행위, 폭동·협박 등 명백한 위협성을 가진 선전·선동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유를 재갈물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 금단 증세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을 통한 처벌에 대해서도 사상처벌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며 "현 체제에 대해 불쾌하고, 적대적·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위협성이 없으면 그러한 표현 자체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사상은 '사상의 시장'에서 드러내 놓고 싸울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일태 동아대 교수를 비롯해 14명의 현직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논쟁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이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헌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형사법 전공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속과 대체입법, 형법 보완론 등에 대한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며 "정치권은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쏘기부

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엔 쏘기부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준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교도소 내의 인적·물적 시설이나 장비의 구성 및 관리방법, 교도직원들의 근무지침, 수용자의 분류와 관리 방법, 가석방심사 관련 규정 등 모두 58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1항 4호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이고도 원칙적인 사항들"이어서 "재소자들이 교도직원들의 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가석방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규모, 교정시설별 수용구분 및 세부지침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개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교정시설이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정보장'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정원 등을 비공개해 왔다.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소는 밀폐된 곳이어서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수용자 처우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 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그 근거조항이었던 7조 1항 4호를 구체적으로 아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내부 예규는 교도소 안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 외부 통제가 전혀 불가능했다"며, "이제 잘못된 예규가 검토되어 헌법과 행정법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후속 과제를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화통화의 첫머리에 '어디야?'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친구 사이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일까?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 찾기' 서비스가 가입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핸드폰 이용자 10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입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과연 '친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있었던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은 이러한 '친구 찾기' 서비스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감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사고나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친구 찾기'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은 신뢰가 깨진 연인이나 부부 사이가 아닐까? 물론 그것이 이들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감시 용도에나 적합한 허점 투성이 서비스를 규제하거나 최소한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피해를 당한 삼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년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은 '친구 찾기'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 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행 위치기반 서비스는 동의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하고 동의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즉 어쩌다 한 번만 동의하면 그 후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추적 당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360만 명이라는 서비스 가입자 수는 결코 현재 특정인으로부터 위치추적을 승인한 사람의 수가 아닌 것이다. 어떤 계기로 한 번 동의하고 그 뒤로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의 숫자이다.

더군다나 지난달 지리산에 있었던 조난사고 인명구조에서 위치추적 서비스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사는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한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치정보 보호와 사고시의 위치정보 활용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상업적 이익의 획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보인권의 보호에는 무관심하고 기피만 으레만 규제를 없애고자 애쓰는 이동통신사와 이들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몇 일 전에 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놓았다. 그러나 많은 정보인권활동가들의 견해는 이것이 위치기반 서비스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일 뿐 정보인권보호와는 무관한 법이라고 지적한다. 하나의 법이 '촉진과 보호'를 동시에 한다? 지금껏 정보인권을 외면하고 업체의 이익에는 관대했던 정보통신부가 위치정보보호법을 권장한다? 차라리 반대로 달리는 말을 묶어놓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트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1.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회 개최해 "보수언론들이 안보 위협 부풀리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9.14)/ 국제엠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9.15)/ 루이스 아버 유엔고등판무관,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 위반,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미"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밝혀...세계국가인권기구에 참여한 세계의 인권활동가들도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 목소리/ 민주 원로들, 기자회견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는 의견 표명(9.16)/ 형법학회들,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정치권 즉각 수용 촉구(9.20)

2. 비정규직 입법안, 비정규직 '보호' 아닌 '확대' 법안

비정규노조 대표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며 반대, 철회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열린우리당, '농성' 핑계 대표단의 면담 요구 거절(9.15)/ 대표단, 기자회견 열어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기 위한 정책"이라 비판, 단식농성 돌입...민주노총,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벌일 것(9.16)

3. '고교 등급제' 부추기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들,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사실상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방안이라 비판(9.15)/ 교육·사회단체들, 고교 등급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교육부의 대입안 확정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9.17)/ 교육부, 대학입시안 23일 확정하겠다는 계획 추석 뒤로 미뤄(9.18)/ 참교육학부모회, 대입수학능력시험 폐지 등의 요구 담아 전국 학부모 2008명이 서명한 탄원서 청와대에 전달(9.20)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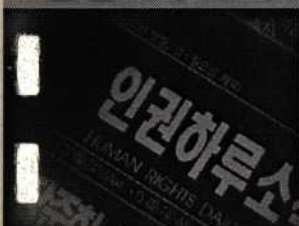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22일 (수)
제 26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2. ▷ 즐거운 물구나무 ◀ 난 월경 중이야!
3.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
4.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저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서 민중 법정에서 기소하고자 합니다." 철근과 종전을 요구하며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단식평화순례'를 진행해왔던 김재복 수사가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민중법정에 기소하는 이유다.

21일 청와대 인근 창성동 주택가에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서 민중법정에 세우는 '전범민중재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지난 4일 청와대를 출발해 평화단식순례를 떠났던 김재복 수사와 동화작가 박기범 씨가 18일간의 순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와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삼았다. 전범민중재판은 기소인으로 참여한 시민 개개인이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와 내용을 만들어 가고 배심원단을 구성해 풀뿌리 민중이 기소와 판결의 주체가 되는 운동이다.

평화단식순례를 함께 했던 동화작가 박기범 씨도 "우리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라크인들의 피 값과 목숨 값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누구도 침략자, 학살자 약탈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 나라 대통령은 끝내 우리 모두를 침략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기에 나를 침략자로 내몬 죄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작가는 "이 나라 정권은 침략군을 보내는 것으로 그 동안 내가 아이들과 함께 가꾸고 배워온 평화와 자유, 생명과 민주주의 같은 가치들을 몽땅 짓밟고 몽게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재복 수사와 박기범 작가는 평화유랑단과 함께 한 단식평화순례를 나선 이후로 울진, 안동, 함양, 여수, 공주, 춘천, 시흥, 임진각 등 10여 지역을 거치면서 '전쟁반대'와 '파병반대'의 평화 목소리를 퍼뜨려왔다. 순례길에서 이들은 지역의 풀뿌리 평화단체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파병을 한 현정권을 규탄하고 이라크 전쟁의 실상을 알려나갔다. 이 과정에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 200여명을 조직해 전범민중재판운동의 씨앗을 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각각 58일째와 44일째의 단식을 마치고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앞으로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소인으로 모아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해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하는 동시에 종전과 철군을 위해 일상적인 평화행동과 불복종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된 이라크 점령의 진실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 이라크 방문 한국인파 이라크인 초청 지역순회증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일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김 수사와 박 작가, 그리고 문 정현 신부 등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391명의 발기인의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을 발족했다. 발기인들은 함양, 피산, 여수 등 전국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 의료인, 법조인,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농민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전범민중법정은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기소인 참여는 홈페이지(gopeace.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난 월경 중이야!

마침 뚝 떨어졌다. 아는 여성의 귀에다 대고 살며시 속삭인다. "생리대 있어요?" 상대방은 가방 깊은 곳에서 주섬주섬 형질 주머니 안에 든 생리대를 꺼내 손에서 손으로 꼭 쥐여 준다.

상당수의 여성들에게 월경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몸의 신호이지만, 공공의 장소에서 월경을 드러내는 일은 여전히 무언의 금기 조항이다. 월경 중일 때 폭 옷에 피가 묻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생리통 때문에 몸 구석구석이 아파도 월경 중이라고 쉽사리 공연하지 못한다. 월경 중인 여성 스스로가 월경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데에는 월경을 감추어야 할 불결한 대상으로 간주해 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 동서양 구분 없이 월경 중인 여성은 각종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고, 중세시대에는 월경 중인 여성을 종교적 절차를 통하여 정화시켜야 할 존재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성이 직접 느끼는 월경을 둘러싼 구체적 경험은 무시한 채 월경을 그저 출산의 예비 단계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월경을 하지 않는 여성은 출산능력이 없다며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취급받는다. 더욱이 월경 중인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놀랍도록 무시된다. 생리통으로 인하여 방바닥을 데굴데굴 굴러도 월경으로 인한 결석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꼭 잠고 학교에 가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여성 노동자들은 월경을 둘러싼 아무런 명시적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자궁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의 신음소리가 계속되어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생리대 때문에 몸이 가렵고 쓰라리다고 호소해도, 생리대가 자궁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저 티 안나고 청결하다고 외쳐대는 생리대 광고만 무성할 뿐이다.

월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언제 끝날지 아득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눈으로 월경을 바라보자고 시작된 월경 페스티벌이 어느덧 6회를 맞이했고, 여성의 몸에 친화적인 대안 생리대 만들기 운동도 뜨겁게 호응 받고 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하고 요구하자. "난 월경 중이야!"

<기사 처음으로>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

'종교 자유' 강의석 학생 42일째 단식...부모 보다 못해 기자회견 열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작했던 강의석 학생의 단식이 42일째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여전히 '예배 선택권'을 인정해 달라는 강의석 학생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옆에서 자식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강제로 병원에 입원도 시켜보려 했지만 강의석 학생이 이를 거부하며 16일 새벽 집을 나갔다가 20일에야 경남 고성에서 발견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오랜 단식과 가솔로 강의석 학생은 말도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다. 하지만 강의석 학생은 예배 선택권이 인정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단식 중단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학교의 결단을 기다려 왔던 강의석 학생 부모는 21일 서울 청량리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의석 학생 부모는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예배나 미션 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거듭 예배 선택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의석 학생의 입장을 지지하다가 교목실장직에서 직위 해제된 류상태 목사도 함께 참석했다. 류 목사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교는 얘기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려면 위협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게 우리 나라 교육 체계의 현실"이라며 "학교가 먼저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목사는 "15년째 교목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강제로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종교의식을 강요하다보면 기독교교육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의석 학생은 서울에 도착해 새벽에 목욕을 하다가 현기증을 일으켜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한 강의석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이제는 학교가 교육자적 자세로 답해야 할 때다.

<기사 처음으로>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중학교 2학년인 공 씨가 공 씨는 학교 교사에게 체벌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입원까지 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공 씨는 마음에 상처만 받고 학교를 옮겨야 했다. 옮겨간 학교에서도 체벌이 계속되자, 공 씨는 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현재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는 다르지만 공 씨처럼 학생이 체벌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아래 참교육 학부모회)는 21일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피해학생 공 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벌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체벌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 학교 부적응 상태, 우울증, 정서적 혼란 등에 이르는 학생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초·중등교육법 31조 7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는 규정이 개별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사실상 규제 없이 체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매의 굵기와 길이, 체벌의 절차와 방법, 장소, 횟수 등을 명시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지침만을 따르도록 하면서 체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맞아야 배운다"는 시대착오적 교육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범무법인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학내 체벌은 맞는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학생들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성인의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데 반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체벌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체벌은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학교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등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23일 (목)

제 26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 2.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특한인권에 접근할 것"
- 3.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유전자정보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집·분석·보관·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시민과학 센터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정보는 일반 정보와는 달리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태까지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이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장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 간사는 "의료분야에서 유전자 검사 시 기본적인 동의절차조차 받지 않고 있고 진단 목적으로 수집된 검체(DNA나 혈액)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나 감독 체계가 미비하고 벌칙이 지나치게 경미하며, 관리·감독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 구축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과장은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 디비 구축은 필요하다"며 "유전자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어 인력적·경제적으로 정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디비(범죄자나 미아찾기 등)를 구축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기초하지 않고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관이나 폐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유전자정보의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반강제로 60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건국대 헌법학 임지봉 교수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범죄자 유전자 디비 구축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범죄자 유전자 디비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현행의 제도를 활용한다면 든든 경찰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처음에는 감정에 호소하며 공포심리를 자극해 성폭력범과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해 유전자 디비 구축을 시도하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전자 디비 대상은 확대되고, 결국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전 국민의 유전자 디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유전자 디비를 구축해 온 영국에서는 이미 그 대상을 전 국민에게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토론 과정에서 이승환 과장이 "유전자 디비의 생명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입력대상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

력해 윤 정책연구원의 지적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다.

<기사 처음으로>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지난 17일 워싱턴 워싱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중 좋은벗들,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등 '한반도인권회의' 참여 단체들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워싱턴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관련이 놓여 있는 맥락을 중시하며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 접근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은 발전권이나 평화권의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결의문의 언어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선택된다. 그러나 사용된 언어는 맥락 안에서 확대해석이나 집중해석이 가능하다"며 "통합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시각에서 북한인권을 접근할 것이며, 평화의 맥락도 함께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모든 활동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란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문은 고문, 구금시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 인신매매, 강제송환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북한 정부가 가입한 조약 하에서의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이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의문에는 북한이 가입한 4가지 조약, 자유권, 사회권, 여성권과 아동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문제에 주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의문이 정한 수입사항 외에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도 조사,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그 중 수용소에서의 생체실험 의혹, 탈북자 문제를 언급했다. 식량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제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보고관의 활동은 독립적이며 비정치적으로 수행되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북한 정부의 공식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은 해당 국가의 공식 초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특별보고관은 "9월 말 제네바에서, 다른 정부 대표들도 만나겠지만 특히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북한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보고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정부, 인권단체, 국제기구와 연대해 자료를 구하고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혼자서는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다른 유엔 조약기구들과 서로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별보고관은 9월 말 제네바에서 관련 정부 대표 및 인권단체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10월에는 사무총장에게 계획과 방법에 대해 구두 보고를 한다. 그리고 연말경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기사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1750명, 국보법 폐지 선언

일상 구속구속에 침투하여 인권침해를 해온 국가보안법의 어두운 그들은 문화예술의 영역에도 깊숙이 드리워져 있다.

22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에는 1750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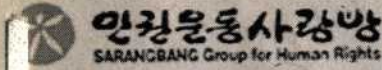
한국인종예술인총연합 문예아카데미 교장 김상봉 씨는 "한국 영화가 약진한 것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검열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하며,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인 양심의 자유와 진지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배우 오지혜 씨도 "개인의 머릿속을 국가가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화감독 변영주 씨는 "시나리오 작가인 한 선배는 지금도 쓰지 말아야 될 목록들을 먼저 적어놓고 작업을 시작한다"며 "국가보안법이 정신과 몸을 사슬처럼 감싸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자 국가보안법 존치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론 분열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후 문화예술인들은 10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뜻을 모아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및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보안법 덕에 전시를 다하는 군 전시회'(가)(15~23일), '아주 타당한 자유를 위한 예술퍼포먼스 시위'(20일)와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15~17일) 영상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24일 (금)

제 26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보기

하 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 2.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 3. <기고> 제9차 아시아아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닦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희섭 변리사는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제도는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관련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실시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3자가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즉 강제실시 적용으로 특허 의약품의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해 복제약을 싼 가격으로 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내 특허법은 강제실시를 국가 긴급상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국가 긴급상태나 의약품 가격이 너무 높고,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식의 특허권 남용 등과 같은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 TRIPs를 잘못 해석해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던 것. 이에 남 변리사는 "강제실시의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 발명정책과 이익회 사무관은 "특허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사유재산이자 지식재산인 특허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고려해야 한다"며 강제실시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특허제도는 특허권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 제도 등을 통한 공공성의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는 빈부 격차 확대,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따른 국가간 갈등과 대립을 '인도주의'와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며 "최근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제비의 증가에 있는 만큼 향후 내수용 의약품 생산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에 의한 건강권 침해는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인 경우로 글리벡은 출시 당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획기적인 치료제로 소개됐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한 알에 2만5천 원을 책정하면서 매일 600만원을 약값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환자는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강제 실시권을 청구했지만 당시 특허청은 이를 기각했다.

<기사 처음으로>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강의석 학생이 4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내 '예배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

23일 오후 5시가 넘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한 것. 기자회견에는 4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늦은 감이 있지만 의식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며 학교에 "종교의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식은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학교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중민 학생은 "종교의 자유가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식이가 처한 현실은 학교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모두의 일"이라며 "의식이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모두가 지지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강의석 학생과 함께 청소년 종교 인권을 위한 청소년 모임 로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찬 학생은 강의석 학생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쓰러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교육부로 날렸다.

한편, 대광고 교사들도 '대광고 기독교 교육문제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학교측에 '예배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13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4일 다시 한번 학교측과 논의를 진행, 예배 선택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 교육 대신 시행할 수 있는 대체활동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감리교여성선교회관에서 아시아 19개국 60명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 160명이 참가한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Migrant Forum in Asia, 아래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94년 대만에서 열렸던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참가자들이 그 회의 명칭을 딴 네트워크를 결성한 이래,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응답해온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96년에도 제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막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94년 1월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산재보상 요구 농성에 이어 95년 1월 13명의 네팔 연수생들이 명동성당에서 진행한 농성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아시아 사회에도 충격을 준 바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유입의 초기에 있었던 이 두 농성은 한국의 경제발전 이면에 세계 최강시 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예 같은 삶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있음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농성과 투쟁을 조직적으로 지원, 연대하며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 또한 각국 활동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시기에 있었던 96년 3차 회의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에서 105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가 되었다. 그 후 2004년 9월 서울에서 다시 열린 제9차 회의는 아시아 19개국 160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로 다시 기록되었다.

여성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답 모색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한가운데 있는 이주노동자, 특히 대규모로 늘어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LO 보고에서와 같이 매년 80여만 명의 아시아여성들이 해외취업에 나서는, 이른바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공격적인 경제자유화정책 앞에서 대부분의 인력 수출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호와는 관계없이 타국 노동시장에서 더욱 유연하고 길들이기 좋으며, 비공식 영역에 가두어놓기 편한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구금과 강제퇴거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과 제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서울 성명' 발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은 '서울 성명'을 발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연수제도 철폐 △외국인가사노동자와 연예인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보호 △노동력 수출국과 고용국간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양해각서와 쌍무 혹은 다자간 협정 체결 △인력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 △성차별을 포함한 어

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보장 △출국 전 교육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 투자와 귀환 프로그램 실행과 훈련 제공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 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행 등을 촉구했다.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회의에 이어진 이틀간(15-16일)의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총회에서 네트워크 회원단체들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각국에서 실행할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팀 구성까지 마쳤다. 또한 이 회의의 후속회의로 내년에 서울에서 여성이주노동자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계획 수립 없이 '성명 발표'에만 그치는데 반해 아시아이주노동포럼은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은 회의를 통한 문제 조명과 해결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또 각국 정부뿐 아니라 아시아 차원에서 필요한 조사, 연구, 로비, 캠페인, 투쟁 등 다양한 행동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10년이라는 기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결성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다. 여기에는 참여 회원단체들의 성실한 연대활동이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을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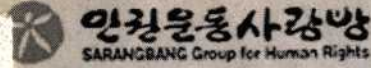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와 지원단체간의 깊이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한 연대를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미선님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9월 25일 (토)

제 26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 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종의 문
2.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3.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4.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5.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종의 문

마침내 변화의 물꼬가 터졌다. 강의석 학생이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꼬박 45일째를 맞은 24일, 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는데도 꿈쩍도 않던 학교가 미흡한 수준이지만 학생에게 예배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많은 이들의 노고와 일구어낸 결실이다. 강의석 학생은 오직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고자 용기있는 행동을 이어왔다. 각계에서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고 청소년들도 직접 나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비판의 열기가 높아지자 무척 임한 자세로 뒷집지고 있던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산처럼 꿈쩍도 않던 학교를 움직여냈다. 인권의 사각지대, 비판의 성역이었던 학교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다.

하지만 이번 결정 내용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예배선택권을 학생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학교에 의해 허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대로라면, 원치 않는 학생이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려면 담임교사, 교목실과의 '상담'과 학부모의 '동의'라는 3종의 문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학생의 자유의사가 꺾이고 그 자리에 학교나 학부모의 강제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학교가 이렇게까지 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종교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억압적인 절차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학교측이 이렇듯 교묘한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탈취해 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선택권은 결코 학교가 학생에게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대광고뿐 아니라 '거짓과 강압의 전당'이 되어버린 다른 종교계 사립학교들도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처럼, 교육당국 역시 모든 학교에서 종교과목과 종교활동이 강제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의 촉수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24일 '제3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마치고 6시 50분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1호선 서울역 환승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이광섭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정확한 상태는 파악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지하철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안전대책마련과 공식사과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고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등 총 5명이 23일 오후 4시쯤 헌법소원을 제기한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바사랏 알리 씨를 찾아와 감금, 협박, 회유를 하다 결국 납치까지 해 소송취하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담소는 "알리 씨가 감금된 곳으로부터 도망쳐 집 근처인 친구 집으로 피신을 했지만 5명이 이를 찾아내 알리 씨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리 씨의 형으로부터 전해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0시경 송출기관 직원 박아무개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알리 씨를 억류하고 있다', '중기협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또한 "지난 해 7월에도 중국인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기협 등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다 못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알리 씨는 직원과 함께 대전, 원주 등을 돌며 회유를 받았으며, 24일 풀려나 오후 8시 현재 창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과장과 중기협 관계자들은 "납치가 아니라 스스로 온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담소는 성명서를 통해 "헌재가 심판을 앞둔 마당에 감금과 납치는 야만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연수생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생존했던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주는 것이자, 현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소원이 헌재에 본안 회부된 사실은 소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로 재판이 들어가기 전까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서 알게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수생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인권유린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연수생 제도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상담소와 민변 경남지부는 알리 씨 등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채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31일 헌재에 본안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사 처음으로>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까지 낳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예외'로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기간제 법안의 경우 기간제 노동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방식의 포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만료 후 정규직화에 대해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노동권 침해만 장기화되고, 3년 전에 계약 종료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파견법안 역시 사실상 파견대상업무에 전면 허용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였다"며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파견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입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방안"이라며 "차별금지 및 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도리어 기업에 부담이 가는 법안"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차별금지 및 시정 내용은 "차별로 인정되기까지 복잡한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을 뿐 아니라, 차별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

진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도 "여성노동자 중 이미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에서도 '여성 우선'이라는 관행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성차별적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업 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건을 대폭 개선하면 기업이 어떻게 인력운용을 하겠느냐"며 재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이에 전국건설노조의 박대규 위원장은 "노동부가 사용자냐"고 반문,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노동계는 10월 10일 전국비정규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총력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국민 1인당 내는 세금은 1년에 342만 원이다. 그런데도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1인당 35만8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400여만 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 중 140여만 명만이 최저생계비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도 증액을 멈추지 않았다.

24일 정부는 2005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 원으로 결정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2008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9.9%씩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철썩 같이 지킨 것.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증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남한의 한해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른다"고 반박,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 무기를 사주기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스페트리어트 미사일, KDX-III 등 MD 무기 도입 예산 전액 삭감 △주한미군 경비분담금 8천202억 원(올해보다 17.4% 증액)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29위(1998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국민총생산의 30%이며, 말레이시아도 2.7%에 이르지만 우리 나라는 겨우 1.8%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 방식을 비판, "사회복지예산, 특히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 확보의 방식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